

현장에서 바라본 경제위기와 그 해법은?

△ 사 회 : 오동진(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)

△ 발 표 : 민경윤(현대증권노동조합 위원장)

- 일 시 : 2008년 11월 7일(금) 오후5시
- 장 소 : 한국노동사회연구소
- 주 최 : 한국노동사회연구소(KLSI)

“진짜 위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”

- 한국경제 기초체력이 부족하다 -

미국 발 서브프라임 위기로부터 시작된 전 세계 금융위기가 결국 한국에 상륙하여 최근 우리금융시장에서 주가하락과 환율상승을 주도하며 한국경제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었다. 그렇다면 한국경제가 위기에 직면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과연 미국경제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대응책을 준비해 본다.

1. 한국경제 위기의 원인

① 금융시장의 측면

- 주식시장으로의 자금집중이 위험회피 기회를 상실
- ELS 등 파생상품의 손실 확정으로 향후 개인 및 기관의 매수여력 감소
- 과도한 외국인 비중과 외국인의 집중적 이탈
- 외환관리의 신뢰성 훼손
- 자산버블이 심각한 수준(부동산 연계증권인 PF 펀드의 과도한 비중)
- 부동산 버블 붕괴로 예상되는 은행 및 증권의 부실우려
- 건설회사의 자금난 우려 수준
- 건설회사 도산에 따른 은행부실화 우려
- 한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부동산을 연계한 금융시장으로 과도하게 편중
- 부동산 버블붕괴로 인한 개인들의 이자부담 증가
- 소비위축 우려
- 카드신용위기 우려
- 개인 및 기업의 대출회수에 따른 신용위험 증가
- 자산매각의 집중화로 인한 자산가치 폭락우려
- 미국 발 실물경제 위축에 따른 소비위축
- 펀드런 등에 의한 금융시스템 상의 위기 우려

② 정책적인 측면

- 환율정책의 혼선이 부른 위기(고환율정책)
- 미국발 위기라는 외부적 요인으로 치부하는 금융정책
- 금융기관의 관리감독 소홀(은행 외화만기 집중 등)
- 경제팀의 정책에 대한 신뢰저하
- 장기적 처방 부재(단기적 금융정책에 국한)
- 금융시장논리를 정면으로 위배(연기금 등을 통한 인위적 개입으로 향후 심각한 부작용 우려)
- 2009년 4월 30일 이후 외환관리 우려
- 자산버블의 인위적 가치하락을 저지하기 위한 정책에 편중
- 규제완화로 인한 금융시장의 통제불능 상태 우려 (미국발 금융위기의 근본적인 처방책이 규제 강화라는 인식을 하지 않음)

- 한국경제 위기의 핵심은 ① 금융기관의 부실화, ② 자산버블의 붕괴 위험증대, ③ 개인 신용위험 증대에 따른 소비감소, ④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저하, ⑤ 실물경제의 장기침체의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.

2. 한국 금융시장의 위기사례

① 은행의 부실화

- KIKO로 인한 중소기업 연쇄도산 증대
- 건설회사 도산위기로 인한 부실우려감 증대(K건설 채권 등은 시장에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음)
- 건설사 연계 PF펀드의 부실화 우려
-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인한 담보대출채권의 부실화 우려
- 엔고로 인한 부실 우려증대
- 달러자금 유동성 확보 어려움 증대

② 증권회사의 부실화

- 은행권의 콜자금 지원 중단에 따른 자금 확보 비상
- 건설회사 PF 펀드 과다 편입에 따른 부실화 우려
- 펀드런 발생에 따른 지급불능 우려 증대
- IB 투자자산에 대한 부실화 우려

③ 상호저축은행의 부실화

- 건설회사 PF 펀드 과다 편입에 따른 부실화 우려
- 개인대출의 부실화 우려

④ 카드 부실화 우려

- 개인신용경색에 따른 카드채권의 부실화 우려(현재까지 진행되지는 않았으나 금리상승과 자산가치 하락이 본격화된다면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임)

- 지금까지의 금융시장의 위기는 환율상승과 주가하락에 집중되었다면 향후의 위기는 자산가치의 하락이 불러올 금융기관의 부실과 신용경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.

3. 한국경제의 정책적 위기 사례

- 강만수 장관의 고환율 정책이 가져온 외환시장의 혼란
- 연기금을 동원한 인위적인 시장방어 정책의 부작용 우려(연기금의 부실화 등)
- 부동산 가격하락을 막기 위해 집중된 규제완화 정책의 효과 의문
- 한국은행을 통한 자금방출에 집중된 정책으로 자금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처방은 전무한 상태
- 감세정책을 통한 소비증대 정책에 집중하지만 실효성은 의문

- 현재 강만수 경제팀의 경제처방은 ① 한국은행을 통한 원화의 무제한 방출, ② 연기금을 통한 금융시장의 인위적 개입, ③ 감세정책 등 세 가지가 핵심이다. 원화공급을 늘리는 것은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있으며 시장의 인위적 개입은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부작용을 산출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. 또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감세정책은 일부에 편중된 국민들만 혜택을 보는 정책으로 이들이 소비를 크게 늘릴 수 있는 정도의 감세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.

4. 한국경제의 예측 시나리오

- ① 주식 및 외환 등 자금시장 혼란 → ② 부동산 등 자산버블의 붕괴 → ③ 은행과 증권 등 금융기관의 부실 → ④ 이자율상승 및 개인신용위험 증대에 따른 카드채권 부실 → ⑤ 소비위축 → ⑥ (?)
- 현재 주가지수는 1,000p 선을 회복했다고 하지만 연기금 등의 인위적인 개입으로 조작된 수치에 불과하며 실질지수는 이미 500p 라고 판단
- 이제 주가지수는 의미가 없으며 실물경제의 위축을 고민해야 할 시기
- 부동산 버블의 붕괴는 한국경제 최악의 시나리오
- 이명박 정부의 경제위기 대처 방법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무너진 상태
- 국민들의 지갑은 신뢰로 열어야 하는데 현 경제팀은 이러한 시장상황인식이 부족